

역대 최대 보증공급 기록…경북신보 ‘쌍끌이 S’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안전망 역할 수행 등 호평 도정 현안 맞춤형사업 발굴 ‘여성정책개발원’ 최우수 독도재단은 모두 C등급·문화재단은 B·C등급 받아

경북신용보증재단이 경북도의 ‘2026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기관평가와 기관장평가 모두 최우수인 S등급을 받았다. 경북도여성정책개발원은 기관평가에서, 경북연구원장은 기관장평가에서 각각 S등급에 올랐다.

경북도는 6일 산하 18개 공공기관의 2025년 실적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기관장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서면 및 현지평가로 진행됐다. 올해는 공공기관 혁신과제를 비롯한 업무혁신 노력 지표를 강화하고, 도정과의 연계성과 도민 체감도를 반영하도록 평가체계를 개편했다.

기관평가에서는 경북신용보증재단과 경북도여성정책개발원이 각각 S등급을 받았다. 경북연구원, 경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경북테크노파크는 A+등급으로 뒤를 이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역대 최대 보증공급 실적을 기록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안전망 역할을 수행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해 올해 지방공공기관 발전유공 대통령표창을 받기도 했다.

경북도여성정책개발원은 아동정책과 저출생 극복, 일·생활 균형지원 등 도정 핵심 현안에 맞춘 신규사업을 발굴했다. 이를 패키지형 사업으로 확장해 여성·가족친화 고용환경을 넓힌 성과를 인정받았다.

A+등급을 받은 경북연구원은 AX센터 신설을 통한 인공지능(AI) 기반 정책연구 확대와 시·군 밀착형 지원체계 구

축에서 성과를 냈다. 경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은 사이소 시스템 개편으로 유통취약농가의 판매를 지원했으며, 농민사관학교와 마이스터대학 신규 교육생을 확보했다. 경북테크노파크는 정부정책과 연계한 신규과제와 지역위기 대응형 사업을 발굴했다.

기관장평가에서는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경북연구원장이 각각 S등급을 받았다. 경북도여성정책개발원과 한국국학진흥원, 경북도호국보훈재단의 기관장은 각각 A+등급을 받았다.

하위등급 결과도 나왔다. 독도재단은 기관평가와 기관장평가에서 모두 C등급을 받았다. 경북문화재단은 기관평가 B등급, 기관장평가 C등급이었다.

전체 기관평가 등급은 S 2곳, A+ 3곳,

A 4곳, B+ 3곳, B 5곳, C 1곳으로 집계됐다. 경북도는 평가 결과를 기관 예산과 기관장 보수·연임 심사에 반영한다.

최우수기관에는 다음 연도 재량사업비를 지급하고, 부진기관에는 경영상비 등 운영비에 재정패널티를 적용한다. 기관장에게는 등급에 따라 성과연봉과 기본연봉을 차등 지급하며, B등급 이하 기관장은 연임 심사·평가를 거치도록 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공공기관은 도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정책과 서비스에 반영해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경영평가로 기관역량을 높이고,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도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정화기자

“전문 수사·인권 보호 최우선…신뢰받는 기관 만들 것”



인력 부족 탓 업무 공백 우려 속 홍종희 대구중수청장 첫 출근 “질책보다 응원 부탁”…향후 충원 시점·조직 정상화 핵심 변수

홍종희 초대 대구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6일 대구 남구 대구지방중수청사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권종민 기자

제를 묻는 질문에는 “일단 시작된 조직이니까 조직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에 우리 중수청이 해야 할 역할이 참 많은 것 같다”며 “대구중수청장으로 임명되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특히 기존 검찰 수사와 차별화된 중수청의 역할에 대해서는 전문성과 인권 보호를 강조했다. 홍 청장은 “중요한 수사에 대해 전문적 수사능력을 갖고 최고의 전문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것과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수사기관이 되는 것,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출범 초기부터 지적돼 온 인력과 물적 기반 부족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여러 가지 물적·인적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다”면서도 “열정과 헌신으로 열심히 함으로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신뢰받는 수사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중수청은 행정안전부가 출범을 앞두고 밝힌 잠정 인원 기준으로 정원 223명 중 146명이 배치됐다. 충원을

은 65.5%로, 정원보다 77명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인 만큼, 향후 인력 충원 시점과 규모가 조직 정상화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특히 대구·경북을 관할하는 대구중수청이 제한된 인력으로 사건을 처리하면서 수사 지연이나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출범 첫날에는 사건 접수를 위해 민원인이 1시간 가량 기다렸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대구중수청 관계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문제로 처리가 다소 지연됐을 뿐 접수는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며, 민원인에게 양해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홍 청장은 이날 대구중수청의 첫 직접수사 사건이나 구체적인 수사 계획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홍 청장은 “오늘은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자리를 마련해 더 깊고 진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추가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이날 청사 로비에서는 수사관들이 도열해 홍 청장의 첫 출근을 맞았다. 홍 청장이 청사 안으로 들어서자, 수사관들은 인사와 함께 박수를 보내며 초대 청장의 출근을 환영했다.

홍 청장은 마지막으로 “질책도 좋지만, 지금 이 순간 저희에게는 응원이 많

이 필요하다”며 “응원 많이 해주시면 힘내서 더 열심히 잘해보겠다”고 말했다.

홍 청장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9기를 수료했다. 대구지검 형사2부장, 인천지검 2차장검사, 서울고검과 대구고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감사를 거쳐, 초대 대구중수청장에 임용됐다.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1면 ‘TK 공동대응’서 계속

이 밖에도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선 지역 산업기반과 발전전략에 부합하는 핵심 공공기관 유치에 공동 대응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이전지 선정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TK가 하나의 초광역 생활·경제권으로 함께 성장하기 위해선 경제·교통·관광·의료 4개 분야에서 행정·재정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세부적으로는 연말까지 5급3특 대경권 성장엔진 육성계획 수립, TK 광역교통망 구축, TK 관광권 추진협의체 구성, TK 초광역 필수의료 공동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에 관해서도 지역 국회의원 및 타 지방정부와 연대해 오는 11월 국회 법안 심사와 예산안 심의에서 현행 기준에 따른 지방교부세 재원이 교부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추 시장은 “지난 7월 경북 방문이 대구·경북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의 출발점이었다면, 이번 4자 회담은 시·도와 의회가 함께 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설정하고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대구·경북이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길은 행정통합과 통합신공항 건설에 있다”며 “오늘 시·도와 의회가 한자리에 모여 뜻을 모은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행정통합을 이루어 내고, TK 시·도민의 힘으로 통합신공항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1면 ‘미사일’서 계속

생산시설과 함께 R&D 기능도 집적한다.

특정 무기체계 생산에 그치지 않고, 후속 유도무기 개발과 시험·검증기반까지 확보해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글로벌 방산 수요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사업 구조는 미사일 생산→차세대 무기 개발·시험·검증→국내 전력화·체계통합→수출→MRO·성능 개량으로 이어진다. 기존 방산 투자가 생산공장 중

심이었다면 이번 프로젝트는 개발부터 수출 이후 정비까지 부가가치 전 과정을 국내에 남기는 산업모델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수출사업도 주요 축이다. 국내 생산체계가 갖춰지면 해외시장별 요구에 맞춘 제품 공급과 수출 확대가 가능해지고, 수출물량이 늘어날수록 정비와 성능개량 등 후속 MRO 시장도 함께 커질 것으로 구미시는 기대하고 있다.

구미가 사업 거점으로 선택된 배경에는 기존의 산업 기반이 있었다. 구미국

가산업단지에는 전자·기계·소재부품 기업과 방산 관련 업체들이 집적돼 있어 정밀유도무기산업에 필요한 제조 공급망을 갖추고 있다.

시는 여기에 미사일 R&D와 생산, 체계통합, MRO 기능을 추가해 구미산단의 방산 산업구조를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개별 방산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를 넘어 R&D와 생산기업, 협력사가 함께 모이는 전문 방산산업 공간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투자가 계획대로 이어질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상당할 전망이다. 신규 설비투자와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고부가가치 R&D와 첨단 제조업 집적, 지역 부품기업의 글로벌 방산 공급망 진입까지 기대할 수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생산시설 하나를 유지하는 사업이 아니라 연구개발부터 생산, 체계통합, 수출, MRO까지 연결되는 새로운 방위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프로젝트”라며 “구미를 차세대 글로벌 방위산업의 중심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